

전북도의회 교육위·환복위 회계연도 결산심사

“불용액 최소화 시급”

교육위, “예산집행 관행적” 지적 재발방지 주문

전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관련기관 등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관행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5일, 도교육청 등 2018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중식(군산2) 의원은 도교육청을 포함한 도내 교육기관 대부분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충분히 검토·관리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군산수영장 신축과 관련해 “수영장 신축사업이 터져버린 이유는 기간간 사전협약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라면서 “기간간 협력·협조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음에도 급하게 추진해 예산이 허공에 뜬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명예퇴직자의 감소와 장애인편의지원대상자가 축소됐음에도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세밀하게 검토·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도교육청 시설사업에서 명사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유가 대부분 동절기 공기부족”이라면서 “공기부족이라는 변명·핑계 등으로 일관하지 말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다. 관리감독을 독려해 동절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실효성 있고 교육목적에 맞게 계획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면서 “결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차기년도 예산이 성립해야 하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불용액 감소에 대한 의지

가 없는 것”이라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교육만큼은 사업과 공립을 구분하지 말고 균등한 대우와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립유치원장 직무연수도 마찬가지로”면서 “특히,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감사는 공립에 비해 엄격. 형평성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최후열(부안) 의원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관행적인 예산도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실질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예산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해서 취소되는 사업이나 불용액 발생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관련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적했으니 여전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환복위 “석면피해 방지에 특단 대책 마련을”

전북도의회 지난 4일부터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6일간 각종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만옥)는 지난 5일 환경복지국, 복지여성보 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 활동을 펼쳤다.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 석면건축물 중 특히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의료·장애·노인시설, 성장기나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국비 확보와 함께 전북도 차원의 관심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가 추진하는 생태관광사업과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국가지질공원 인증 지질명소 발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울초 환경부랑 전북도가 파악한 도내 불법 폐기물량이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한바, 우리 전라북도도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날로 복잡해지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규모·단기적 사업에서 탈피해, 중대규모·장기적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환경보전기금(현재 20억원)을 확충할 방안에 대해 수년간 도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음, 내년에는 예산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옥정호 수면이용에 대한 전북도의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 정읍시와 임실군간의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 소지에 대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예비비 사용 적정성과 관련 우박피해 산림작물 복구가 예비비 사용에 적합한 것인지 지적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의 경비인 예비비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상습 고액체납자 최대 30일까지 유치장행

정부, 감지명령제도 도입... 체납 국세 합계 1억원 이상

체납자 여권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금지도 추진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촌 이내 혈족까지 금융조회

상습적으로 국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는 감지 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를 상대로 법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체납자 감지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올해 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지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지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내지 않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지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중복 감지 금

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체납자 여권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불가능해 체납자가 당일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을 추적하기 어렵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악의·상습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정부, 갑질 사건 목인

은폐한 기관명 공개

정부가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 면접과 승진시험에 관련 평가 항목을 연말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갑질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명과 그 내용을 일방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징계 갑질 사유에서 갑질을 배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한다. 공무원 승진 평가 요소에도 같은 항목을 반영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분야가 갑질행위에 엄정 대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갑질 사건이 목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을 공개한다. /뉴스



“전북 화이팅” 지난 5일 전북장애인체육회장인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 문건위 의원들, 참가 선수들이 참석해 전주 라푸체에서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북도선수단 해단식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지보상 재평가시 1년여 진행 수용절차 간소화”

도의회 문건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북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북도선수단 해단식 참석하는 등 현장의정활동 벌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지난 5일 제36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전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결산심사 후에는 곧바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북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건위원들은 명사이월된 사업 중, 특히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관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인 점을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순창), 이정린 의원(남원1), 김대오 의원(익산1)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보상 지연 문제에 대해 토지주들의 불만족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1년여간의 재평가기간이 진행되어 사업이 이월될 확률이 높은 만큼 토지수용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전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교통안전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사업들이 대부분인 점을 지적했다. 민의 교통안전 증진은 물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시 교통비를 지원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해 원안가결했다.

결산심사 후에는, 바로 현장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북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한 문건위원들은 4일동안 열렸던 이번 대회에서 열심한 경기

에 임해준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대회성적보다는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에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냈으며, 노력한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부안군 미취업자 대상 창업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부안군 관광산업 연계형 창업지원사업]

- 모집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나이제한 없음)
- 모집마감 : 2019.06.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접수
T. 063-280-5238
메일: suyong2@kijeon.ac.kr
(신청서제출 : www.kijeon.ac.kr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교육기관 : 2019.06.24 ~ 07.05 (총 40시간)

교육혜택

참여자 교육비 전액 무료
(마케팅, 회계, 법률 등 총 40시간)
창업 지원금 최대 **1,300만원 지원**

사업설명회

장소: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
2019.6.13(목) 오후 2시

“사업설명회 참석인원 기념품 증정”